

“지구촌 쓰레기 한국행?”...中 폐기물 또 수입금지

작년 폐기물 수입량 240만...수출 12배 ↑ 중국 수입 문닫고 외국쓰레기 유입 늘어 전문가들 “수입 폐기물 관련기준 세워야”

중국 정부가 생활쓰레기에 이어 산업폐기물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한국이 '쓰레기 수입국' 비통을 이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량은 239만1067t으로 전년 233만5488t보다 5만557t 증가했다.

전체 폐기물의 80.4%인 15만 7776t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다. 이어 폐촉매가 1만3126t, 폐유리는 7659t이 각각 수입됐다.

반대로 수출량은 2016년 27만 6616t에서 8만337t이나 급감한 19만6279t으로 7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한국은 폐기물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12배 이상 많은 나라가 됐다.

문제는 이같은 폐기물 수입·수출간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중국의 잇단 금수조치로 갈 곳을 잃은 선진국들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어서다.

1992년 체결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협정 당사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가, 리히텐슈타인 등에만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다. 선진국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출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온 중국이 올해부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19일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 등과 폐 PET병과 폐신박, 폐차 등 고체폐기물 32종을 올 연 말과 내년 연 말 두 차례에 걸쳐 16종씩 '수입 제한 목록'에서 '수입 금지 목록'으로 옮기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에서 발표한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지품, 바나플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개 고체폐기물 수입을 올해부터 중단한데 이어 3년 연속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승희 경기도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수입량이 많아지면 그 과정에서 유해성 폐기물이 포함돼 들어와 문제"라며 "중국으로 가지



못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돈을 더 주더라도 재활용 시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출량(19만6279t)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금수조치를 강화할수록 국내에서 소화해야 할 폐기물량은 기존 수입량과 함께 증가가 불가피하다. 대중국 수출량은 2015년 23만999t에서 지난해 12만7917t으로 10만 이상 떨어졌다.

게다가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 연료, 화학적재 등으로 재활용해야 할 업체들은 국내산보다 외국산을 선호한다. 가격도 저렴한데 제조 단계에서 색소를 넣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국산과 달리 상태가 균질해 재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해성 폐기물 증가 등으로 한국이 무분별한 '쓰레기 수입국'이 되면서 '수입폐기물 선별기준' 등을 하루빨리 수립해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업체인 금호자원 안소연 대표는 "중국도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기 몇년전부터 법·제도 등을 준비해왔을 것"이라며 "수입폐기물에 대한 규제에 앞서 성분 분석, 품질 기준 등 다

양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입 규제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쓰레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라며 "중국처럼 일방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산업계에서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환경부는 법제화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11월 환경부가 한국 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20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보증금제 재도입 때 다회용컵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부담금 나부 어려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제품 가격 상승, 경쟁력

저하, 경영난 등으로 어이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찾는다.

이윤리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대포장 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고 유통포장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공기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화장품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규제완화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제도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7월엔 감량의무 대상 재포장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뉴스

□ 폐기물 수출입 현황(전체)

구분	'15	'16	'17
수입	2,309,146	2,335,488	2,391,067
수출	314,374	276,616	196,279

□ 폐기물 수출입 현황(중국)

구분	'15	'16	'17
수입	39,415	154,398	48,688
수출	230,999	214,449	127,917

‘1회용컵 보증금제’ 한층 강화돼 10년만에 부활



환경부 '폐기물억제대책' 발표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때 폐지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한층 강화돼 10년만에 재도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컵보증금 제도,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1회용컵에 담긴 음료 구입시 일정금액(50~100원)을 내고 사용한 컵을 구입매장에 반환할 경우 돌려주는 제도다. 2002년부터 39개 브랜드 3500여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추진해 왔으나 2008년 3월 회수를 부족(37%)과 미반환보증금 관리 불투명성,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폐

지됐다.

이에 환경부는 법제화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부담금 나부 어려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제품 가격 상승, 경쟁력

저하, 경영난 등으로 어이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찾는다.

이윤리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대포장 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고 유통포장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공기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화장품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규제완화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